

시론

오월 종전 선언과 5·18연구센터 제안한다



김영집  
광주대 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5·18 정신의 이름으로 이란 전쟁 즉각 종결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5월 광주 행사에서 '이란 전쟁의 평화적 종전을 위한 광주선언'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더불어 그간 논의돼 왔던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광주유치와 5·18 연구센터 추진을 제안한다.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인류가 쌓아온 국제법 질서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뿌리째 흔들었다. 미국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유엔 헌장 2조 4항이 규정된 '무력 사용의 금지' 원칙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이란의 학교, 병원 등 비군사 시설과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민간인 학살이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개전 이후 민간인 사망률은 이전 분쟁 대비 40%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어디 그 뿐이라, 이 전쟁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

다. 유가 상승은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 대 안팎으로 밀어 올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상 물류의 마비는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은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며 국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유통공급 불안정과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비 증가와 환율 및 증시 불안이 잇달았다. 이재명정부가 겨우 살려낸 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란 전쟁이 초래한 재앙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시대의 최대 장애물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참모로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고 평화 지지의 외교 노선을 견지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매우 정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또 정부는 유가 상승억제와 물가 안정 대책, 유가피해 보전 등으로 민생 경제안정을 도모 코스피 7천대 돌파하며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정치 경제적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란 가운데 광주에 다시 오월이 돌아왔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란 전쟁 중에 맞이하는 광주 오월은 전쟁 종결과 평화의 해법을 찾고 호소하고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권·민주·평화'의 광주 5·18 정신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보여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다. 자유 평등의 프랑크형명 정신이 전 세계의 자유평등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아시아인권선언의 도시 광주는 이번 오월 종전 평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5·18 행사에서 '이란 전쟁의 평화적 종전을 위한 광주선언'이 결의되길 바란다. 광주가 이제 국제적인 폭력과 전쟁을 멈추라는 명령을 세계에 발신해야 한다. 5·18 정신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비극을 멈추게 할 강력한 평화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은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후퇴한 극우보수정당이자, 위헌 쿠데타 정당으로 역사에서 확실하게 심판받아야 할 정당이라는 것을 이번에 개헌 투표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올해 5·18에서는 이란 국민의힘을 단호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지역감정을 악용해 보수회귀선거에 이용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체에 5·18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내외 인권·민주·평화 확산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지원 5·18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이번 오월 정부·정당·지자체·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이런 연구소 하나 만들 때도 됐다.

社說

K-민주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광주 5·18 규모지

5·18 규모지는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으로, 진상규명 투쟁의 발원지로 꼽힌다. 전두환 정권의 폐쇄 시도를 시민 참여로 저지한 대표적 사적지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등이 안장된 5월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이다.

광주시는 민주공원으로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 관련 단체 대표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15차례의 운영과 50여회 단체별·개별 설명 및 논의 등을 거쳐 드디어 합의안이 나왔다. 대규모 야외 추모를 위한 행사마당과 박석마당을 만들고, 다목적 행사공간도 들어선다. 또 전시장인 역사관과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도 신축된다.

3년만의 결실이다. 오랜 숙의 끝에 구체화한 만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광주시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빛의 혁명 발원지'이자 'K-민주주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날 것 이란 기대감이 배어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펼친 끝에 5·18 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총사업비 2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다.

국가 주도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추모와 시민휴식 기능을 갖춘 민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5·18민주묘지와 연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980년 희생자들이 최초로 실려온 장소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창작 배경지로 알려져 있다. 역사관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5·18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런 역사다. 불의한 국가권력,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받고 있다.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은 예전 모습으로 복원됐다. 기록물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돼 인권, 민주, 평화의 가치를 지구촌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5월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권력 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 역시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되새기고 있다. 규모지는 70여 만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참배하고 있다. 세계인이 찾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전남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5곳 내외를 추가할 계획이다.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이미 진행하고 있는 10개 군을 제외한 59곳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44곳이 접수를 마쳤다. 전남에선 강진·구례·보성·장흥·함평·담양·영광·영암·장성·진도·해남군 등 11개 군이 도전장을 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공모에 참여했다. 반면 화순·고흥·완도군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부 검토를 거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구 6만명인 화순은 총사업비 1천620억원, 군비 부담은 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은 관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이끄는 제도로 실질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신안과 곡성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각각 8.3%, 3.9% 급증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이다. 전남 3곳의 사례에서 보듯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크게 줄여줘

야 한다. 현재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구성돼 있다. 국비 지원부터 대폭 늘리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지자체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신속하게 자금을 편성,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인구감소지역 입장에서선 울며 겨자먹기 식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특이나 빠듯한 살림에도 빛을 내는 것인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선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 입장에서선 만만찮은 비용이다. 자발적인 참여이긴 해도 책임을 감당하기엔 한결 같이 버겁다.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 지역 발전을 도리어 저해할 우려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든 현실을 살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을 핵심 대책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군비를 10~20%로 조정하는 게 맞다. 지속적인 요구를 더 물리치지 않았으면 한다.

기고

험난한 고유가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정영수

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경영학박사

올해 2월28일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먹구름이 일고 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당분간 유가는 상승세가 지속돼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기름 값이 오르면 단순히 교통비는 물론 물류비까지 상승해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갑은 얇아지고 원화 약세로 달러 환율리스크의 확대도 이어진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반해 이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재 및 물류비가 상승하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고유가는 한국경제가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다 물가상승, 저성장, 경색수치 적자라는 악

재들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 시장원리와 정부정책은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와 개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유사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대체 에너지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영 안정화 정책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고, 연비절감을 위한 운전습관과 주유 할인카드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고유가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고유가와 공급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원유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노선의 다변화, 재생에너지와 ESS 확대, 바이오 소재와 대체 플라스틱 육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안보, 방산 역량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산업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고유가에 따른 경기불황은 기업에게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고경비 절감과 유연한 경영 체제를 통해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유행 경제는 기술 혁신과 자원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고유가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단기적인 악재로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포트폴리오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할 좋은 기회이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도가 지나간 뒤 훨씬 단단해지고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독자투고

농기계 운행 안전수칙 준수, 교통사고 예방 첫걸음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도로에 경운기, 트랙터, 농업용 팜트럭 등이 운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일반 운전자와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 이상 높으며, 농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농기계 사고는 4월과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안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씻어내 등화 장치 및 야광반사지가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농기계는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중앙선을 기준으로 맨 우측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거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

비 등 민사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세번째로 농기계에 짐을 실을 때에는 등화장치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 주행 시 등화장치가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농 준비는 한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처럼 농기계 운행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을 숙지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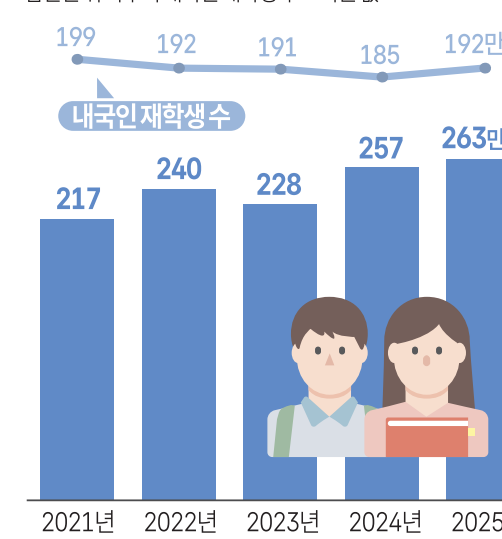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의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값



연립뉴스 자료: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국내 대학생 1명이 1년간 정부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줄인 규모가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천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쓰인 정부 재원은 모두 5조566억1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천307억8천300만원이다. 정부 재원 장학금 규모는 2021년 4조402억7천700만원, 2022년 4조2천907억4천900만원, 2023년 4조2천530억1천600만원, 2024년 4조6천181억1천2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은 1천258억2천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1년 217만원, 2022년 240만원,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263만원을 2023년 수치와 비교하면 2년 사이 15.4% 늘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Address. Includes sections for 편집부 (Editorial), 정치부 (Politics), 경제부 (Economy), 사회부 (Society), and 광고문의 (Advertising).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구로번 15,000원 1부 800원